

	<b>보도자료</b>	
	<b>작성</b>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센터장(044-960-0222)
	<b>배포</b>	국토연구원 홍보팀(044-960-0582)
<b>보도일시</b>	즉시 보도 가능	

##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研,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과 「국토기본법」 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 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 ‘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 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첨부. 국토정책brief 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담당자 (☎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